

전화 한통에 은행카드의 95 만원이 ‘날아갔다’!

만약 생소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시험 사용 기간이 1년인 보험업무를 개통했는데 현재 기한이 만료되었기에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9,6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 전화를 받은 리녀사는 긴장해냈다. 9,600원의 비용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업무를 취소하기 위해 그녀는 곧바로 ‘고객서비스 일군’의 안내에 따라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고 불명의 App를 다운로드했다. 이어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던니 은행카드에 있던 95만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체되었다.

‘고객서비스일군’ 전화 받은 후 은행카드의 95만원 이체

리녀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화를 받을 때 그녀는 “종래로 이 보험업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매년 자동적으로 9,6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지도 않다.”고 이 인터넷 플랫폼 ‘고객서비스일군’에게 명확히 말했다. 이에 상대방은 “오작동으로 구입한 것일 수도 있다.”며 “계속 사용하지 않으려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녀사가 사기전화라고 의심하는 걸 눈치채기라도 한 듯 상대방은 곧장 리녀사의 완전한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썬여있는 보험가입서를 보내왔다. 매년 9,600원씩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리녀사는 초조해했다. 하지만 ‘고객서비스일군’은 휴대폰에 2개의 App를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리녀사에게 낯선 링크를 보내왔다. 리녀사는 이 두 App가 평소 사용하던 공식 써비스 소프트웨어와 비슷해보여 요구 절차에 따라 조작했다.

“클릭해보니 ‘인터넷 플랫폼 페지’라고 써여진 회의 다운로드가 있어서 다운로드하자 상대방은 나에게 회의 번호를 알려주었다.”라고 리녀사는 말했다.



이어서 무서운 장면이 발생했다. 리녀사가 회의번호를 클릭하자 그의 휴대폰 화면은 곧바로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 과정에 이른바 ‘고객서비스일군’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리녀사를 위로하면서 “이는 업무를 취소하는 정상적인 조작이니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시간이 1분 1초 지나면서 리녀사는 이 조작이 너무나도 수상쩍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녀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려고 할 때는 이미 아무리 클릭해도 휴대전화에 대해 아무런 조작도 할 수 없었다.

리녀사는 급기야 휴대전화를 들고 관할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다. 경찰은 곧장 조치를 취해 그녀의 휴대전화를 켜다가 시스템을 다시 재개했다. 뒤이어 리녀사는 자신의 은행카드에 있던 130만원 예금 중에서 95만원이나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지금 흐름 추적해보니 일부 사기 당한 돈이 돈세탁 단계로 넘어가

경찰측은 신속히 전신사기 응급처

리 기제를 가동하여 사건에 연루된 구좌에 대해 서둘러 지불정지와 동결을 실시했다. 리녀사는 후회막급이었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불법 이전된 95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여부였다.

공안국 반사기센터 경찰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 사기당한 95만원의 자금중 90만원이 사건에 연루된 1급 구좌로 넘어간 외에 남은 5만원은 범죄자들에 의해 모 슈퍼마켓 쇼핑카드 구매에 사용되었는바 이미 돈세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때는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측은 즉시 은행시스템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90만원의 자금을 동결함과 동시에 슈퍼마켓 플랫폼과 연동하여 근 5만원의 소비대금 지불을 긴급히 제지시켰다. 경찰측의 30분간 긴급처리를 거쳐 리녀사는 사건에 연루된 95만원의 자금을 전액 돌려받았고 현재 사건은 진일보로 되는 수사처리중에 있다.

어떻게 이런 사기를 방지할까? 경찰 특별 부탁!

경찰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리녀사가 부딪친 이번 사기사건은 아주 강한 미혹성을 띠고 있다.

범죄자들은 사전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다. 이어 고객센터 일군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어떤 업무를 잘못 개통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써비스 패쇄는 휴대전화에서 간단히 조작하면 된다.”고 피해자를 더 유도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흔히 경각성을 늦추게 된다. 이때 사기군은 ‘공식써비스’로 위장한 링크를 발송하여 아주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부 App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비용 납부 써비스를 폐쇄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한다.

실제로 이런 App들은 불법 프로그램이다. 일단 설치되어 실행되면 불법 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폰의 통제권을 얻게 된다. 리녀사와 같이 휴대전화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통제력을 잃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런 사기군들이 온라인 플랫폼상의 고객서비스일군, 금융기구 사업일군 등 신분을 사칭하여 허위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App를 다운로드하도록 피해자들을 유도하여 사기치는 사건은 한가지만 명기해도 피면할 수 있다. 반드시 휴대폰 공식 앱스토어(官方应用商店) 등 정규 경로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지 통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링크를 클릭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App를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한다. 낯선 전화, 특히 앞자리가 00으로 시작되는 경의 전화를 받지도, 낯선 인터넷 주소 링크를 쉽게 클릭하지도, 자신의 은행카드 정보를 쉽게 누설하지도, 낯선 사람에게 쉽게 이체하지도 말아야 한다.

/CCTV 넷



‘82 일 병가’, 진짜 아팠다면 콘서트 관람 갔을가?



근로자는 병가를 낼 권리가 있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법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직원 주모는 허리통증으로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해 출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병가 도용’을 했다. 그러나 병가 기간에 다른 성에 가 콘서트를 관람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주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급에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024년 3월 17일, 항주의 한 콘서트 현장에 직원 주모가 있었다. 당시 그녀는 허리통증이 심해 출근할 수 없다며 65일간의 병가를 낸 상태였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병가를 냈다.

남경시중급인민법원 민 5정 4급 고급법관 류의는 “주모의 교통수단 탑승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녀는 병가 기간에 고속철을 타고 여러차례 다른 성으로 이동해 콘서트를 관람하고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소개하면서 “회사는 로동계약 해지전 주모와 여러차례 사실 확인을 했고 정말로 침상에서만 쉬고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계속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직원 주모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 3개 병원에서 병가 명세서 11장을 발급받아 총 병가 일수 82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가벼운 허리 디스크 증상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회사는 주모의 진료에 동행했으며 의사는 “증상이 매우 경미해 장기간 신체 마비나 침상 안정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주모가 허위 증서를 제출하며 무단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2024년 4월 2일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녀는 같은 달 하순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류의는 “회사가 허위 병가를 이유로 그녀와의 로동관계를 해지한 것은 사실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근로자가 진정으로 휴가가 필요할 경우 고용단위는 리해심을 가지고 최대한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도 병가 신청 시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말로 건강상 휴식이 필요할 때만 해당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2월 20일,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주모의 행위는 회사의 규칙제도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성실성 및 전문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회사가 주모를 해고한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주모의 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 신회사



《김립신문》 해외판 법률고문단 위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지난달에 “중국에 단독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기간에 체불한 중국 직원의 로임을 지급하라.”는 중국 법원의 최종심 판결을 무시하고 한국에 도주한 한국인 사장을 상대로 법적 반격(무료 공익소송)을 시작했다고 5월 11일 기자에게 전했다.

사건 경과

광둥성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 국적의 투자자 박씨와 전직 근로자 중국인 오씨간의 로동분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전 소속 회사인 Y의류유한회사에서 근무했던 오씨에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2배 임금 차액 및 불법 해고에 따른 보상금 총 8만 2,856.32원(인민페)을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오씨와 그의 배우자 진씨가 2019년 4월 9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광주시 백운구에 소재한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Y의류유한회사에서 재봉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한국인 투자자 박씨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박씨는 법정대표자이자 유일한 주주였다.

2020년 4월, 오씨는 회사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로동분쟁 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로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2020년 6월 Y의류유한회사에 6만 9,856.32원의 2배 임금 차액과 1만 3,000원의 불법해고 손해배상금을 오씨에게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 법무법인 재유

중국 직원 로임 체불하고 도주한 한국 사장 상대로 무료 공익소송

1심 법원 : 근로관계 인정, 사용자 책임 명확

중재 결과에 불복한 박씨는 광주시 백운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가 실제로는 자신이 아닌 제3자인 한국인 신씨가 운영하고 있었고 오씨와의 근로관계 또한 신씨측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 Y의류유한회사의 법정대표자 및 단독 주주는 박씨이며 법인 말소전까지 모든 인사 및 재무 활동은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
 - 박씨는 공장장 퇴사 및 감사 신씨로부터 직접 채용·업무 지시를 받았고 급여 또한 회사 명의 또는 관련자의 계좌를 통해 수령했음.
 - 위챗 채팅 기록을 통해 공장장이 2020년 3월 30일자로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됨.
 - P씨는 중재 및 1심 절차에서 자신이 서명한 소장 내용조차 부인했으나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설명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법원은 박씨에게 법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재 결정을 존중하여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2심 법원 : 항소 기각... 법적 책임 명확

박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했으나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 인정된 오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했으나 이를 뒤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전혀 없으며 법원이 단독 주주이자 법정대표자로서 청산 의무를 회피한 점도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본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었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단독 투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정대표자가 회사를 사실상 통제하거나 청산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로동 관련 채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실제 사업장에서 이뤄진 업무지시와 급여 지급의 형태, 위챗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근로관계의 립증 자료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결 확정에도 끝나지 않은 분쟁

광주시중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 오씨는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재산

조회 결과, 피고 박씨는 중국내에 어떠한 명의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박씨는 이미 회사 말소 직전인 2020년경 한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씨가 손에 쥔 중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사문화된 종이조각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다시 구제의 길에 나서

중국 법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도 박씨의 해외 도피로 인해 단 한푼도 집행받지 못한 오씨, 그러나 그의 절망은 한국 로법의 인지도 개입으로 다시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오씨의 막대한 사연을 접한 후 “중국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한국으로 도주해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주목하고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조활동은 한국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무료 변론 승인을 받아 공익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오씨를 대리하여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국 판결에 대한 효력 승인 및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이다.

중국 판결도 한국에서 강제집행 가능

오씨가 중국 법원에서 받은 확정 판결은 단순한 외국 문서가 아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현행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 제 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법원의 판결 역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 해당 외국 법원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국가로서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
- 본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고용관계에 대한 판결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이 명백하다.
- 적법한 송달 및 방어권 보장 : 피고 박씨는 중재 및 1심과 2심 과정 모두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응소했고 절차적 권리도 보장받았다.
- 공서량속 위반 없음 : 판결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한국의 질서 또는 공공정익에 반하지 않는다.
- 상호주의의 요건 충족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 298조는 한국 판결을 중국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실질 구제의 가능성 사례도 존재

앞서 2024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중국 김립성 통정인민법원

의 판결(2021길 2405 민초 142호)을 한국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인용한 사례(2024머 52347)가 존재한다. 본 사례도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변호사에 의해 중국내 채권자가 한국내에 체류중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실제 강제집행을 이끌어낸 대표적 선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씨 역시 향후 한국 법원으로부터 중국 판결의 효력 승인 및 집행 허가를 받을 경우, 박씨의 한국내 예금, 부동산, 사업체 지분 등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익적 구조 활동의 의미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는 “해외에서 벌어진 분쟁이라 해도 법적 정의를 국경을 넘는다.”며 “소외된 외국인 로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익사건은 북경천치군태(광주)변호사사무소[北京天驰君泰(广州)律师事务所]의 류건훈(刘建勋) 변호사와 북경천치군태(성도)변호사사무소[北京天驰君泰(成都)律师事务所]의 총총(丛丛) 변호사가 중국 현지에서 오씨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공증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어 한국 법원에 사건 접수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광상적인 중한 량국 변호사들의 협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았다.

더불어 “오씨의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 로동분쟁을 넘어 중국과 한국의 민사판결 상호 승인과 집행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 유경봉기자

연계전화 : 13604447151

